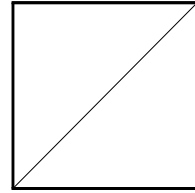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21 호
의 결 연 월 일	2024. 4. 30. (제 8 차)

의
결
사
항

신라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4. 4. 30.

1. 의결주문

신라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라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허위의 전환사채 인식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위탁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20조, 제422조, 제424조 및 제44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허위의 전환사채 인식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 신라자산운용(주) : 업무의 일부정지* 3월
 - *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금지
- 前 ■■■■ ◆◆◆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 □□□□ △△△ : 직무정지 3월

나.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위탁 위반

- 신라자산운용(주) :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 前 ■■■ ○○○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 2>

다. 관계부서 협의

- 제22차, 제24차 제재심의위원회(2022.9.22., 10.6.) 심의필
-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2022.11.15.) 심의필
- 청문(2023.7.31.) 실시
- 제20차, 제8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3.11.9., 2024.4.25.) 심의필

<별지>

신라자산운용(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신라자산운용(주) : 업무 일부정지 3월*,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금지

- 조치사유

- 허위의 전환사채 인식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위탁 위반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32조(회계처리) 제1항 제3호,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3항 및 [별표1],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41의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2> 미.,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제1항,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제2항, <별표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I-2

□ 임원에 대한 조치

○ □□□□ △△△ : 직무정지 3월

- 조치사유

- 허위의 전환사채 인식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32조(회계처리) 제1항 제3호,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별표1],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제1항,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제2항, <별표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I-2

○ 前 □□□□ ◆◆◆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 조치사유

- 허위의 전환사채 인식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32조(회계처리) 제1항 제3호,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별표1],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3항,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제1항,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제2항, <별표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I-2

○ 前 ■■ ○○○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 조치사유

-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위탁 위반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별표1],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3항,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제1항

2. 조치사유

가. 허위의 전환사채 인식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 신라자산운용(주)(舊 모놀리스자산운용(주))은 (주)●●보 발행 제2회차 전환사채(액면 XX억원, 평가금액 XX.XX억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20XX.X월말 및 20XX.X월말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XX.XX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20XX.X.XX. 제출한 20XX.X월말 업무보고서(재무상태표)에는 전환사채 보유내역이 없으나 이후 반기검토과정에서 전환사채를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20XX.X.XX. 업무보고서 수정

나.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위탁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는데도

- 신라자산운용(주)(舊 모놀리스자산운용(주))은 20XX.X.X.~20XX.X.XX. 기간 중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호가 취득한 (주)■■■■■■■■■■■■■■■■■■■■ 전환사채 XX억원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보관한 사실이 있음

관계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회계처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를 금융투자업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것
2.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
3.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 회계처리준칙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을 따를 것

② (생략)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①~② (생략)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④~⑦ (생략)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22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1. (생략)

41의2. 제18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41의3.~49.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⑤~⑥ (생략)

[별표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등의 사유(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1.~15. (생략)

16. 제32조제1항 각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180. (생략)

181.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이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제184조를 위반한 경우

182.~312. (생략)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⑦ (생략)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회계처리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 ~ 7. (생략)

② (생략)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수

15.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필요에 따라 추가공시한 경우 포함)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미. 법 제18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41호의2	10,000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 가. 삭 제
 -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제3호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정지조치 또는 제4호의 위법·부당행위의
중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점营业을 계속하거나 당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라. 제7호의 기관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3.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가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행위가 일부 영업점에
국한된 경우로서 위법·부당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 영업점의 폐쇄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9. (생략)

② (생략)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
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나. 금융기관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
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서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
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5. 주의

②~⑥ (생략)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생략)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I. 공통부분

I-2. 회계 부당처리(상호저축은행은 제외)

1. 제재대상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회계처리 기준 및 개별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회계관련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

2. 제재기준

- 회계 부당처리의 발생동기 및 규모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

분 식 규 모 (규모비율)			
I (기준비율의 8배 이상)	II (4배 이상 8배 미만)	III (2배 이상 4배 미만)	IV (1배 이상 2배 미만)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 1) 규모비율 산정 등 제반사항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의 ‘심사·감리 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준용

2) 신용협동조합법 적용대상 조합에 대해서는 동 조치양정기준 <표 1>의 규모산출표상 2.규모조정계수의 주식내용 적용을 배제하고, 규모금액이 700억원~300억원인 경우의 규모 조정계수는 “0.8”, 3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0.6” 으로 한다.

- 회계 부당처리는 회사의 경영방침 등에 기인한 사항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대표 이사를 주된 책임자로 제재한다. 다만, 담당 임직원에 주된 책임이 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제재할 수 있다.
- 상근감사(위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감독책임(주된책임자보다 감경)을 부과한다.
 - 다만, 감사(위원)가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토록 하는 등 감사로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위법행위를 사실상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제재할 수 있다.
- 회계 부당처리의 발생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되거나 규모가 큰 경우(관련 임원 문책경고 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기관에 대한 제재를 병과 한다.

3. 가중 및 감경

- 위법행위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기준

- 위법행위를 통하여 BIS 비율,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이 크게 왜곡되어 우리원의 적기시정조치 대상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 위법행위가 관련법규의 위반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비자금 조성, 횡령, 배임, 기타 불법자금 세탁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 위법행위가 2회계년도 이상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위법행위가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적 거래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나. 감경기준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없는 비상장 금융회사이거나 회계 부당처리 규모가 미미하여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에서 명확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세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처리한 경우(차액의 50% 이상을 위반금액에서 감액)
- 회계추정의 차이 등 판단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경우(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에 의하여 계산된 것과 중요한 차이가 발생된 경우에는 제외)
- 우리원에 위법행위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위법행위 사실을 공개한 경우
- 감사착수일 현재 과거의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차기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이미 시정한 경우
- 기타 대내외의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법행위가 단순과실로 발생하여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금융투자검사2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7630